

## 2004년부터 형광등, 필름류(합성수지재질포장재)도 EPR 대상품목에 포함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 이치범)에서는 내년부터 '형광등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중 필름류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재활용의무가 확대되는 형광등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중 필름류의 제조·사용업자 및 수입업자는 금년 11월말까지 2004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는 포장재 표면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분리배출표시는 금년 1년간은 유예기간이며, 2004년도 출고분부터는 분리배출표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원재생공사 EPR제도운영처(전화 032-560-

1821/9)에 문의하거나, 공사에서 운영하는 EPR홈페이지([www.epr.or.kr](http://www.epr.or.kr))를 참조하면 된다.

### □■ 건설폐기물, 재생골재로 거듭난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골재를 생산 공급하는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10월 2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년 간 총 1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2005년까지 수도권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다른 권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천연골재의 수요 및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은 해마다 증가해(1998년 19% → 2002년 53%) 매립지 수명이 단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에서는 생산되는 재생골재는

시범적으로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하수처리장 진입도로(2003년 4월~),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2003년 10월~) 등에 재생골재 적용에 따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 결과를 토대로 일정비율의 재생골재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재생골재의 수요처 발굴을 위해 환경부, 건설교통부, 지자체 등 정부기관, 관련업계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 2004년도 환경부 예산안

참여정부 들어 처음 편성한 2004년도 환경부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4,575억원으로서 2003년(추경포함 1조 4,036억원) 대비 3.8% 증가한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소관 세출예산의 증가율 3.8%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평균증가율 2.1%를 상회할 뿐 아니라 금년도 추경예산(22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5.5% 증가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환경부는 내년에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급수취약지역의 물문제 해소를 위한 식수원 개발사업,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에코-2 프로젝트 등 당면한 역점사업들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대기보전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이 부진하거나 곤란했던 사업의 예산은 대폭 삭감 편성했다.

그 결과 대기보전 분야는 전년 대비 27.5%, 자연보전 분야는 16.3%가 증가한 반면, 용자예산이 많아 집행이 어려웠던 상수도 분야는 15.4%가 감소하였고, 소각 시설 설치 예산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했기 때문에 폐기물 분야 예산이 7.4% 감소했다.

#### 〈폐기물 재활용분야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03 예산	2004 예산안	증(△)감	%
계	266	504	238	89.5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171	289	118	69.0
공공재활용기반시설	95	171	76	80.0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건설	-	39	39	순증
나눔장터 운영	-	5	5	순증

###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환경부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환경마크상품, 재활용상품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 및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11월 4일 오후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국회(환경경제연구회 회장 이부영 의원), 재정부, 산자부 및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녹색구매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환경상품제조협회,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법안을 중심으로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환경부의 법률제정안에 의하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총 921개(산하기관 포함 경우 2,900개)의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별, 품목별로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이행 전년 11월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이를 분석·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무구매비율을 정하여 공포하면, 각 기관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동 법안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일반상품보다 10% 이내로 비싸더라도 구매하도록 하거나 수의계약이 더 유리하도록 하며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급촉진을 위해 업무를 상시 지원하는 '친환경상품 지원센터'를 설립, 구매담당자와 조달기관 및 지원센터간 구매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매담당자가 친환경상품 구매로 예산절감의 경우 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환경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키로

환경부는 동절기에 강추위 등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 소각하거나 합성수지 등을 노천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단속을 위해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를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도가 주관하여 시·군, 검찰

청, 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시·군·구는 읍·면·동 단위 또는 취약지역별로 2인 1조 이상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단속과 함께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행위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반사회 자료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토록 하고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와 고무, 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토록 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5호(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를 적용하여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하는 등 강력 처벌토록 했다.

## □■ 시민감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감사 실시

중앙부처에서는 최초로 시민환경감사관제도를 도입한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시민환경감사관3명을 직접 참여(2003년 10월 13일~10월 8일)시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대한 감사에는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김미화 사무처장, 원광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김종인 교수, 가천길대학 환경시스템과 민달기 교수가 시민환경감사관으로 참여해 업무개선 및 시정사항을 지적했다.

김미화 사무처장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사전 준비상태와 추진과정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폐기물재활용 의무생산자와 의무생산자들의 업무를 대항해 주는 공제조합을 의무이행실태 점검대상에서 누락시킨 사례, 각 재활용업체의 의무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실적이 저조한 사례(전체대상의 32.5%만 점검), 실태점검 시 규정위반 사항을 적발하고도 미조치한 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인 교수는 시화폐비닐처리공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면서, 난청 등 직업성질환 요관찰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순환보직과 작업장의 공정을 개선,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각종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내부 자체평가위원 5명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사를 선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가천길대학의 민달기 교수는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 시행되었는데도 화장실에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는 등 금연빌딩에 관한 준수 의무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는 등 기존의 감사에서는 간과되었던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열의를 보였다.

## □■ 환경정책 고객 모니터제도 도입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입안·결정·시행하는 과정에 여론주도층 인사, 관계전문가, 일반국민 등 10,000여명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투명하고도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결정 시행에 들어간 정책들에 대한 성과·효과·문제점 등을 사후 모니터링 하는 소위 '환경정책별 고객관리체계'를 구축, 12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On-line 시스템으로 '쌍방향 메일링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결정 공무원과 고객 간, 고객과 고객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전용대화 채널인 '포럼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모집도 할 계획이므로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환경부 또는 환경관리청에 전화를 하거나 E-mail,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환경정책의 수립·결정 또는 집행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은 고객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 산자부 제6차 신기술, 우수품질 및 우수재활용 인증서 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윤교원)은 지난 10월 7일 기술표준원 강당에서 제6차 신기술(NT ; Korea New Technology), 우수품질(EM ; Excellent Machine, Mechanism & Materials) 및 우수재활용(GR ; Good Recycled)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수여 대상은 48업체 48품목으로 NT(신기술인증)이

12업체 12품목, EM(우수품질인증)이 35업체 35품목이었고 GR(우수재활용인증)은 (주)공영Re의 재생 합성수지제 세설모래함 1품목이었다. 이번 인증으로 NT(신기술인증)는 총 566건, EM(우수품질인증)은 총 873건, GR(우수재활용인증)은 총 200건을 인증하게 되었다.

신기술(NT), 우수품질(EM)과 함께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우수재활용(GR ; Good Recycled)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발생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해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우수재활용인증마크(GR)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활용제품이라 하더라도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제품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인증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 환경표지 대상제품 확대 및 인증기준 개정 · 고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종류가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환경표지 대상제품군을 현재의 85개에서 94개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을 설정해 고시했다. 또한 이미 인증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10개 대상제품군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 동향, 여타 제도와의 연계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에 인증기준을 개정한 대상제품군은 감지형 등기구, 방전램프용 안정기,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진공청소기, 산업용 세척기 및 산업용 세정제 등 10개다. 이들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은 대부분 제정하지 3년이 경과돼 정기적인 검토과정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들이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의 범위가 제품에서 기기·자재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기기·자재 관련 대상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첨단환경기술과 환경친화제품 한자리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서울특별시,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공동으로 기업의 첨단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사용을 생활화하

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COEX 인도양관에서 '국제환경산업박람회'를 개최했다. 150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 개막식에는 정부에서 한명숙 환경부장관, 이명박 서울시장과 윤교원 기술표준원장, 국회에서 송훈석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정일, 이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우수재활용인증(GR)제품, 우수환경설비인증(BEC)제품과 해외의 UL(미국보험협회 안전시험소)마크와 CE(Communaaut Europeen)마크를 인증 받은 제품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 중에서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환경친화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들이 전시되었는데, 기술표준원 측은 국내 전시참여기업들의 친환경경영 노력과 환경친화제품의 개발의지를 국내외에 홍보하는데 이번 박람회개최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수수료 인상

수도권 지역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크게 인상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운영위원 심의에서 현행 톤당 1만 8,070원을 받는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를 내년부터 2만2,500원으로 36% 인상키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오는 2005년에는 톤당 2만7,060원으로 다시 32% 올림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반입수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반입수수료 인상계획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 □■ 재생골재 시범사업 수정 불가피

환경부의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시범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04년 환경부 예산 심의에서 재생골재 시범사업의 일부 계획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38억7,600만원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생골재 시범사업 계획을 수정 보완한 환노위가 승인을 해야만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노위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음에 따라 사업의 추진 주체를 관련 협회나 조합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 □■ 전자산업진흥회, 전자제품 환경규제 대응팀 추진

선진국의 전자제품 관련 환경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관 합동대책팀이 꾸려진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최근 선진국이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및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전문가 전담팀을 발족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규제 물질에 대한 대체소재 및 친환경제품 개발,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유럽 연합(EU)의 전자산업 환경규제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맡게 된다. 아울러 오는 2005년부터 생산자가 직접 폐전자제품을 수거 및 처리토록 강제하고 있는 유럽의 WEEE 지침과 관련, 유럽 28개국의 제도와 현황자료를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진흥회는 전자산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구조로 전환할 경우 국산 전자제품의 가격과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 컴퓨터는 넣고 프린터는 왜 빼나?

폐프린터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는 폐프린터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프린터의 재활용 민간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 발생량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매립된다는 이 같이 주장했다.

쓰시협은 현재 컴퓨터 재활용업체에서 프린터 생산업체의 위탁을 받아 해체·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EPR 대상품목으로 편입시키더라도 재활용과 관련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체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개선이 요구되며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 기술적인 보완만 이뤄지면 된다는 설명이다.

쓰시협은 프린터 생산업체가 난립하지 않을뿐더러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EPR 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해성, 재활용 방법 등이 비슷한 컴퓨터는 EPR 대상품목으로 지정되고 프린터는 제외된 것은 품목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 발포스티렌협회, 재활용지원금 3억원 지급 예정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안복현)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자율재활용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재활용사업자에 대해 총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는 2003년 상반기 재활용사업자 56개소에 스티로폼 재활용 실적 4,877톤에 대한 지원금 85,179천원을 지급했다. 상반기에는 법 시행 초기로 많은 지급 대상자들의 서류준비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했으나 하반기에는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협회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아 재활용의무생산자인 전자제품제조업체 59개소, 음식료품·의약품제조업체 13개소, 농수축산업 및 유통업체 25개소, 농수축산물상자 제조업체 33개소 등 총 130개소를 대신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스티로폼을 회수하여 잉고트 등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지자체 및 민간재활용사업자들과 재활용 위수탁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 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 시설·운영자금 융자지원

(사)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업무의 수행과 더불어 아직 상당량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 시설설치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반구축의 하나로서 혼합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플라스틱을 수집, 선별하거나 고형연료화, 유화, 목재화 등 에너지회수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 중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설설치, 운영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희망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신청하면 된다.